

2025. 5. 13.

민주당 선대위 농어민본부 전국 먹거리단체와 간담회 개최

- 전국먹거리연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과 정책간담회 개최 -
-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자급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에 공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가 전국 먹거리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13일(화)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전국 먹거리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농어업먹거리 정책의 통합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들은 “현장 농민으로서 생산에 대한 고민과 먹거리 운동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종합전략 수립·추진을 국가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의 근간으로 삼아 지난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배옥병 이사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제2의 주식인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자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든 단체에서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민관협력과 범부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주요 먹거리 정책 과제로 ▲먹거리기본법 제정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설치·운영 ▲공공급식을 통한 먹거리 보장과 친환경농산물·우리밀 소비 확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의 전면화 ▲생협 등 대안유통 경로를 통한 생산-소비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농어민본부와 전국 먹거리단체는 오늘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정책협약 체결 등 지속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